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金 洪 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

건의료산업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대단히 큰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의약품, 생명공학, 첨단의료기기 등은 반도체, 정보산업통신 등과 함께 정부의 적절한 기술개발지원 노력과 민간투자 확대가 뒷받침될 경우 21세기에는 핵심 선도기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미국, 일본, EC 등은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 보건의료산업에 중점을 두어 육성하여 왔다. 신물질 및 특허 등의 기술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1990년대 이후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에 산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업계 및 학계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보건 의료서비스로서의 기능에 국한하여 생각하여 왔다. 또한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다. 기술개발지원 등 산업지원정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다. 그 결과 보건의료산업은 영세기업 중심으로 취약하고 기술수준도 낮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국제경쟁력 또한 취약하여 WTO체제의 출범 및 OECD가입으로 인한

보건의료산업은 기초과학의 기반 위에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시설이나 인력 등 과학기술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개방화 추세로 국내 보건의료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기초과학의 기반 위에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초과학과 첨단과학기술이 결합한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시설이나 인력 등 과학기술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상품수요가 다품종 소량으로 연구개발 투자부담이 막대하고 기술개발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세한 수준에 있는 관련업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문중소기업체가 이를 모두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은 재원조달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설비자본에 있어서의 지원을 전략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자생적 기술혁신의 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보건의료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등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

할된 지원체계가 체계적인 지원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 및 기술개발은 결국 인간의 지식과 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우수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보건의료부문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술이전 시장메카니즘(Technomart)'의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입장에서는 취약한 기술도입 교섭력을 보완하고, 도입기술에 대한 정보부족이라는 애로점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국가연구지원사업의 국제화를 통하여 타국과의 공동연구사업을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비용으로 고수준의 연구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해외 투자에 의한 선진기술의 습득을 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된다. **끝**